

## 하반기 글로벌 교역 영향요인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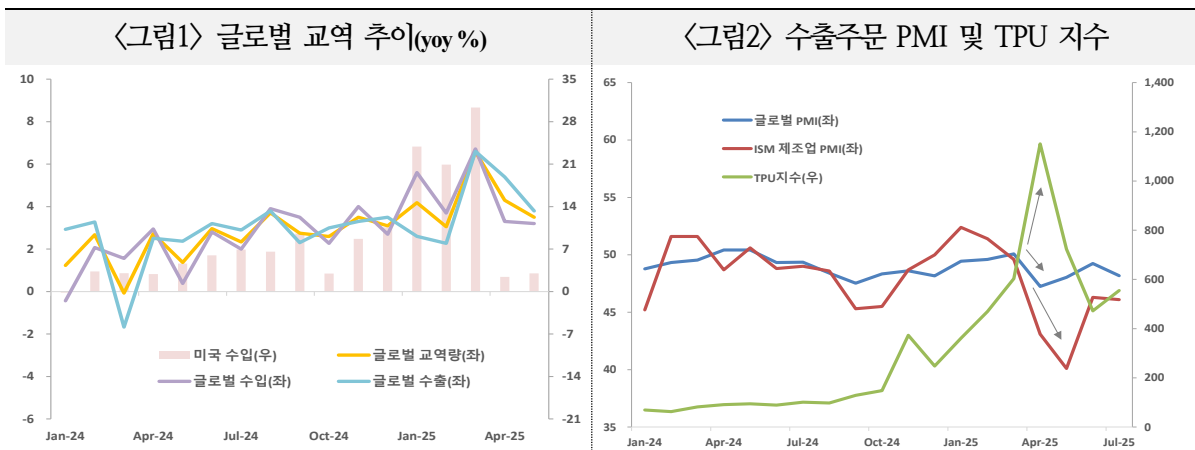
박진혁 | 부전문위원(3705-6149)

김위대 | 경제리스크분석부장(3705-6240)

- [동향] 금년 들어 미국발 관세 이슈가 글로벌 교역의 핵심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1분기 상품교역은 양호했으나 2분기 들어서는 다소 위축
  - 글로벌 상품교역량은 조기 선적 수요(tariff rush) 영향 등으로 1분기에 약 4.6%(yoy) 증가하였으나 2분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3% 중반대로 둔화
- [영향요인] 하반기 글로벌 교역에서는 ▲관세 리스크 ▲공급망 재편 가속화 ▲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하방요인이며 ▲유럽·중국의 재정지출 확대 ▲디지털 상품 수요 증가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
  - (미국발 관세리스크)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. 8.1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관세율의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 기업들의 수입계획을 제약
  - (공급망 재편 가속화)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고 미중 경제 블록의 분리를 촉진할 가능성. 단기적으로 이에 따른 재편 비용이 증가
  - (경제성장률 둔화)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발 관세 여파, 주요국 가계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
  - (유럽·중국의 재정 확대) 방위력 강화, 디지털·친환경 전환 등을 위한 유럽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제조업 및 내수 회복에 중점을 둔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은 수입수요 증가요인
  - (디지털 상품 수요 확대)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AI, IoT, 클라우드 관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 확대요인으로 부상
- [전망] 하반기 글로벌 상품교역은 하방요인이 상방요인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증가세 둔화 소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
  - EU 등의 재정지출은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, 디지털 교역 증가도 전 산업에 미치는 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
  -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은 미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보다 위축되면서 연간 2% 내외('24년 2.9%) 증가에 그칠 전망

□ [동향] 금년 들어 미국발 관세 이슈가 글로벌 교역의 핵심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1분기 상품교역은 양호했으나 2분기 들어서는 다소 위축

- 글로벌 상품교역량은 4.2일 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조기 선적 수요(tariff rush), 기저효과 등이 동반되면서 1분기에 약 4.6%(yoy) 증가
  - 교역량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, 수입 측면에서는 북미(+25.1%)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, 수출은 라틴아메리카(+9.1%), 아시아(+8.3%) 순으로 크게 증가
  - 품목별(금액기준)로는 사무 및 통신장비(+16%), 화학(+12%), 의류(+7%) 부문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자동차부품(-4%), 철강(-3%) 등은 부진
- 2분기 들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면서 교역량 증가율이 4월 4.3%, 5월 3.5%로 둔화<그림1>
  - 1분기 동안 급증세를 보이던 미국의 수입증가율이 4월 들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증가율도 하락하였으며, 5월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
    - 반면 아시아 신흥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수출(5월 +3.9%, +4.8%) 뿐만 아니라 수입(+5.8%, +10.3%)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우회수출(예: 중국→베트남·인도네시아 등→미국)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
  - 교역 관련 선행지표들을 참고해 볼 때 데이터가 미집계(CPB 경제정책분석국 기준)된 6월 이후에도 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
    - 7월 글로벌 PMI 및 ISM 제조업 PMI 수출주문 지수는 각각 48.2(-1.0p ↓)와 46.1(-0.2p ↓)로 6월 대비 하락하였으며, ISM 수입 지수도 47.6(0.2p ↑)으로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<그림2>
    - 한편 무역정책 불확실성(TPU)지수는 7월 555로 '24년 1월(70)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. TPU지수가 상승할 경우 PMI 수출주문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<그림2>



자료: CPB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

주: 상품물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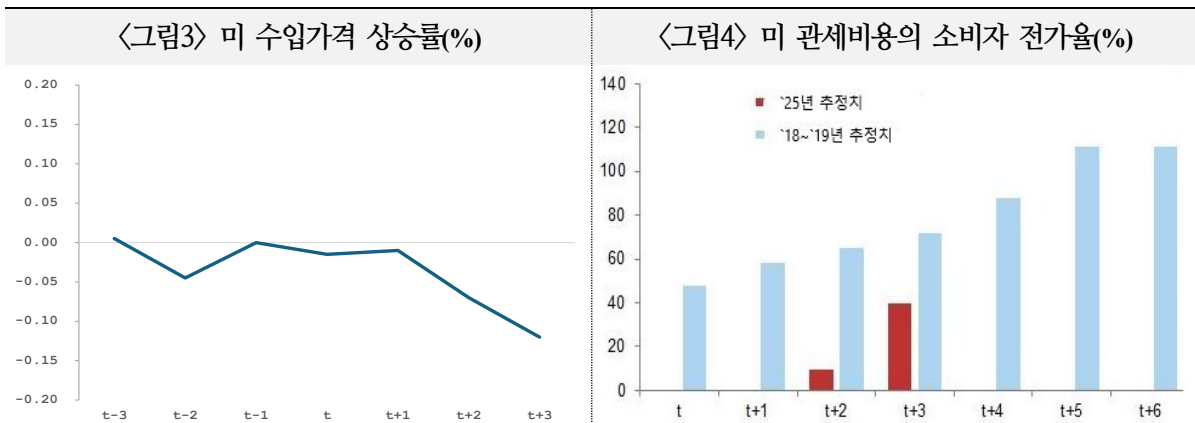
자료: Matteociacoviello, JPM 주: TPU=Trade Policy Uncertainty

□ [영향요인] 하반기 글로벌 교역에서는 ▲관세 리스크 ▲공급망 재편 가속화 ▲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하방요인이며 ▲유럽·중국의 재정지출 확대 ▲디지털 상품 수요 증가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

○ (미국발 관세 리스크)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. 8.1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관세율의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여 기업들의 수입계획을 제약

- 수입관세는 제품가격 상승 또는 해외 수출업체 및 미국 기업들의 마진 축소로 이어져 글로벌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한다는 점에서 미 상호관세[참고1] 발효에 따라 교역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될 전망

• 과거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율이 100%일 경우 단기 수입량이 최대 10~15% 감소 현재까지 미 수입가격 등으로 추정해 볼 때 해외 수출업체가 관세인상분의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이며, 소비자 전가율은 40%로 '18~'19년에 비해서는 다소 제한적인 수준(GS)<그림3,4>



자료: GS 주: 관세율 1%p 인상에 따른 '25년 관세 부과품의 수입가격 변화

자료: GS 주: 가로축은 관세부과시점(t) 기준 경과 개월 수

[참고1] 주요 국가별 예정 상호관세율 및 교역 비중

	상호관세율(8.4일 기준)	수출비율(% of GDP)	총 수출 중 대미 수출비중
중국	30%(잠정치)	20%	15%
멕시코	25%	37%	81%
캐나다	35%	33%	77%
EU	15%	51%	21%
베트남	20%	87%	29%
태국	19%	70%	17%
인도	25%	21%	18%
한국	15%	44%	19%
일본	15%	22%	20%

자료: 세계은행, World's Top Exports, Reuters 외 주: 상호관세율은 진행중인 협상 등에 따라 가변적임 수출비율(서비스 포함, 대미 수출이존도는 '24년 기준(일부국 '23년)

- 한편 여타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될 경우 미 관세정책이 8월 이후에도 변화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역활동의 추가 축소를 유발하고 교역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 -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성 증가 시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 확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, 미 관세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국 보복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무역·투자 결정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스탠스가 확산될 소지
- (공급망 재편 가속화)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고 미중 경제 블록의 분리를 촉진할 가능성. 단기적으로 이에 따른 재편 비용이 증가
  - 교역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 전략이 변화(효율성 중심→안정성 중심)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
    - 글로벌 교역 흐름이 변화할 경우 아세안·남미(중간재 교역 허브), 아프리카(원자재 수출) 등의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. 아세안은 전자기계, 남미는 에너지·광물자원 중심의 중간재 조립·가공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보다 부각
  - 한편 미중 간 무역 갈등 및 기술경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의 이원화 구도로 재편성될 가능성도 상존
    - 미중 간 디커플링 추세가 강화될 경우 미국은 전자, 의류/섬유, 기계 부문에서, 중국은 농산물, 소프트웨어, 항공기부품 등에서 대체국 전환 움직임이 빨라질 소지[참고2]
    - 베트남, 태국, 인도와 같은 중간지대 국가들은 단순 수혜국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밸류체인 내 전략적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

[참고2] 미중 간 주요 수입 품목별 대체국

미국의 수입 대체 예상국		중국의 수입 대체 예상국	
전자제품(40~60%)	한국, 베트남, 태국, 멕시코	농산물(20~60%)	브라질, 아르헨티나, 호주
가전제품(50~65%)	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	소프트웨어(60~80%)	인도, 이스라엘
의류/섬유(20~25%)	베트남, 방글라데시, 인도	항공기 부품(20~35%)	러시아, 인도
기계류(35~38%)	독일, 일본, 멕시코	화학제품(20~40%)	한국, 일본, 싱가포르
핵심광물(70% ↑)	호주, 캐나다(정제시설 제약) ※ 단기 내 공급망 대체 어려움	첨단 전자제품(50% ↑)	러시아(우회 수입), 한국, 일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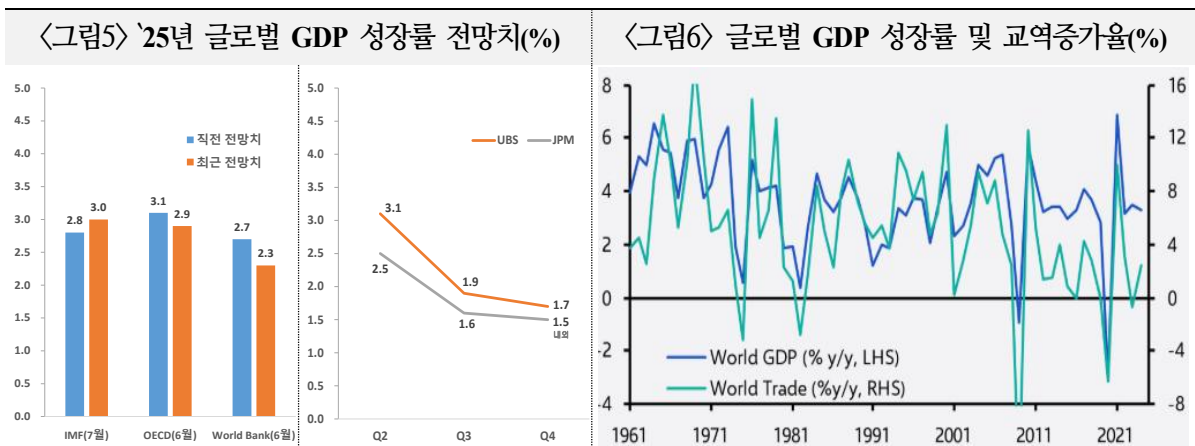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OECD, Trendforce, Eurasiareview 외

주: 괄호 수치는 미중간 수입 의존도

- (경제성장률 둔화)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발 관세 여파, 주요국 가계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
  - OECD(6월 0.2%p ↓)와 World Bank(6월 0.4%p ↓)는 '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

조정하였으며, IMF(7월 0.2%p↑)는 미 관세 수준이 4월 발표보다 하락한 것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소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더 우세한 것으로 평가<그림5>

- 주요 IB들은 글로벌 성장률이 상반기 평균 약 3.0%에서 하반기 평균 1% 중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
- GDP 성장률이 교역량에 미치는 탄력성(글로벌 GDP 성장률 1%p 둔화 시 상품교역량 2~3% 내외 감소, WTO 외)을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교역 위축 가능성이 상당<그림6>
- 주요국들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제조업 기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(독일, 일본 등)과 원자재 수출국(브라질, 칠레 등이 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



자료: IMF, OECD, WB, UBS, JPM 주: 분기별 전망치는 qoqsaar 자료: Capital Economics

- (유럽·중국의 재정 확대) 방위력 강화, 디지털·친환경 전환 등을 위한 유럽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제조업 및 내수 회복에 중점을 둔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은 수입수요 증가요인
- EU 역내 소비재 및 자본재 수요 증가는 미국, 아시아 주요국들의 수출 확대로,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는 중동·아프리카의 에너지, 원자재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
- OECD는 6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의 재정지출\*은 EU 내 교역 활성화→글로벌 수요 회복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
  - \* EU는 'Readiness 2030'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최대 8000억 유로 투입 계획, 독일은 '25년 공공투자 확대(24년 대비 350억 유로↑), 국방·인프라 투자에 12년간 5000억 유로 지원 등
- 중국의 경기부양도 투자 및 소비 증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호주, 인도네시아 등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과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재 수출 회복에 기여
- 중국의 경우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요 충격의 여파가 3분기를 중심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상당부분은 경기부양책\*으로 상쇄될 전망(Oxford Economics)
  - \* 소비진작,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1.3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추진 등

- (디지털 상품 수요 증가)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AI, IoT\*, 클라우드 관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 확대요인으로 부상

\* Internet of Things,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로, 물리적 환경을 디지털 세계로 연결

- AI 확대·보급은 소프트웨어 영역 뿐만 아니라 중간재-완제품-디지털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교역 수요를 촉발
  - AI 데이터센터 확장(25년 미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규모 최대 3,200억 달러 예상, CNBC) 수요가 중단기내 글로벌 IT·전자 부품 교역의 주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AI 인프라 투자 붐은 글로벌 교역 하방압력을 상쇄할 요인(Citi 외)
- 또한 제조(스마트팩토리), 물류(추적 및 수요예측), 의료(원격진료), 농업(스마트팜)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IoT 기반 스마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장비, 플랫폼 등의 수요가 급증
  - '25년 IoT 시장규모는 약 1.3조 달러로 예상. 디지털 전환의 3대 핵심 축인 IoT/AI/클라우드 시장은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(Research and Markets)

#### □ [전망] 하반기 글로벌 상품교역은 하방요인이 상방요인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증가세 둔화 소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

- EU 등의 재정지출은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, 디지털 교역 증가도 전 산업에 미치는 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
-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은 미 관세 영향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 보다 위축되면서 연간 2% 내외('24년 2.9%) 증가에 그칠 전망
  - World Bank와 UNCTAD는 '25년 글로벌 교역증가율을 각각 1.8%, 2.0% 내외로 예상. 특히 8월 이후 상호관세 시행 여파로 미국 및 주요국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
    - '25.8~12월 중에는 미국의 교역량이 전년동기대비 -1.35%, 중국 -0.88%, EU -0.45% 감소하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-0.65% 감소할 것으로 추정(CGE 모형 추정)
  - 다만 관세 인상에 앞서 늘어난 선수요 영향 등으로 금년 교역증가율 둔화폭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
    - IMF는 7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엄청난 규모의 조기 구매로 인한 일시적 교역 증가 등을 '25년 교역 전망 개선(4월 1.7%→2.6%)요인으로 평가
- 한편, EU-중국 간에도 EU의 불공정 무역조사,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시도 등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관세장벽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